

전력산업도 변해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전력공사 · 산업자원부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공기업인 한전에 의해 독점운영되고 있다. 이윤 동기가 없는 공기업은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 나태해지고 방만해짐으로써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현재 한국전력은 독점 공기업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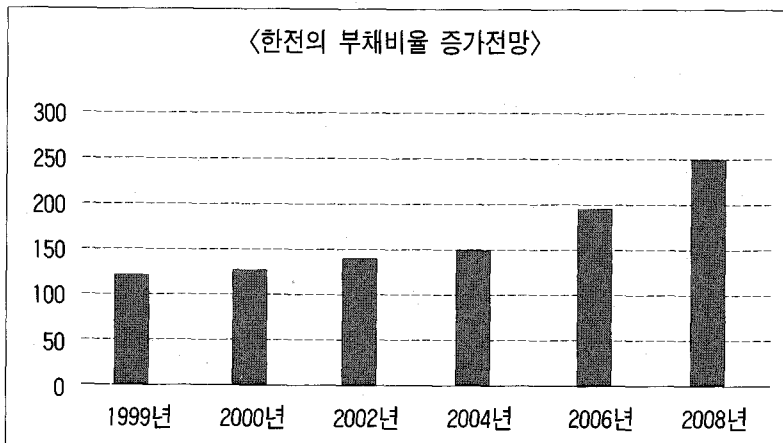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규모

지금 추세대로라면 연평균 전력수요 증가율은 5%에 이르러, 2015년이 되면 최대수요가 지금보다 약 80% 증가한 6,751만kW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15년동안 총 106기의 발전소를 새로 지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투자비는 약 46조원이며, 송·

변전 설비투자비 21조원이 추가되면 총투자비 규모는 67조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한전 자체에서 조달할 수 있는 투자비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매년 8~9조원을 외부로부터 빌려 와야 한다.

운영자금도 차입에 의존

앞으로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지 않을 경우, 전기판매 수익의 절반을 원리금 상환을 위해 투입해야 하고 기초 운영자금마저 빚으로 추당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2008년에는 부채가 약 68조원에 부채비율도 253%로 높아져 재무구조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



설비는 주기적으로 과잉·과소 반복

전력산업은 대표적인 장기산업이다. 따라서 설비투자의 효율성에 따라 생산성이 크게 달라진다. 그런데 공기업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투자비용 전액이 요금으로 회수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위험이 거의 없다. 자연히 시장에 대한 분석력이나 예측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전설비는 주기적으로 과잉·과소투자를 반복한다. 이러한 불균형은 곧바로 전력수급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1980년대 우리가 경험했던 과잉 설비나 1990년대 초의 전력부족 사태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단기설비 치중은 원가상승과 직결

설비가 남아 돌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고 반대로 설비가 부족하면 투자비 마련을 위해 요금을 인상하는 한편 단기설비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된다. 최근에 LNG발전기 설비 용량이 적정 수준보다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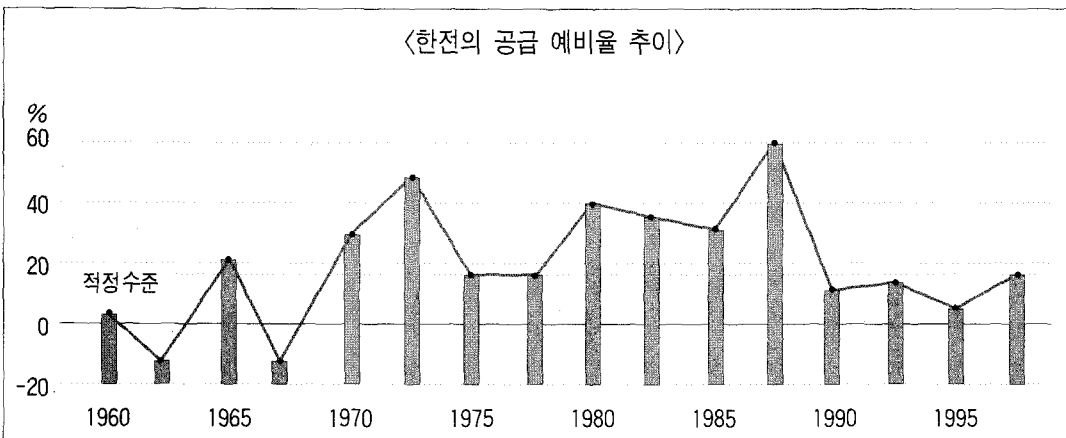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1990년대 초에 발생한 전력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기에 건설할 수 있는 설비에 투자가 치중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최적전원 구성의 불균형은 발전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비효율적 조직·인력운영

현재 한전의 조직은 지속적인 확대로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다. 본사에 수많은 관리조직을 두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지사·지점 등 거미줄 같은 사업소 조직을 거느리고 있다. 지나치게 세분화 되고 방대한 조직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원조직이 중복되는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한전의 의사결정 구조는 지나치게 상위로 집중되어 있다. 그 결과 필요 이상으로 본사의 지침과 결정에 의존함으로써 현장특

〈한전의 공급 예비율 추이〉



성에 맞는 적절하고 신속한 상황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순환보직 등으로 전문성에 장애

한전은 인력의 운영에 있어서도 순환 보직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인력 운영방식은 전문성을 쌓는데 장애가 되고 있으며 성과에 따른 적재적소의 인력배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원가에 충실하지 못한 요금체계

우리나라는 현재 용도별로 전기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즉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등으로 분류하여 요금수준에 차등을 두고 있다.

원가는 전압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전기의 공급원가는 사용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까?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초고압 상태인 765kV에서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110V까지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압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쳐 공급된다. 즉 전기의 원가를 결정짓는 것은 주로 전압이다. 따라서 지금의 용도별 요금체계로는 원가를 충실히 반영할 수 없다. 원가에 충실하지 못한 요금체계는 귀중한 전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불합리한 요금체계는 산업발전을 저해

정부는 그동안 제조업의 경쟁력 지원을 위해 산업용 요금을 원가대비 95%로, 저소득 농어민 생계지원을 위한 농사용에 대해서는

48%수준으로 요금을 낮게 책정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적 요금제도로 인해 우리 경제구조가 전력 다소비형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균형있는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과도한 공익사업 비용부담

한전은 물가안정 등과 같은 거시경제 정책에서부터 국가 에너지정책수행에 이르기까지 거의 준정부적인 기능을 담당해 왔다. 또한 공기업으로서 공익적인 기능도 수행해 왔다.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이나 원자력 사업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에너지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쟁력이 없는 국내 무연탄이나 국제가격보다 비싼 장기계약 LNG도 의무적으로 구입해 왔다.

또 다른 요금인상요인으로 작용

문제는 이러한 과도한 공익사업 비용이 전기요금에 그대로 반영되어 결국 요금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만일 무연탄 대신 유연탄을 사용한다면 1999년 한해에만 1,766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는 전기요금의 0.82%를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LNG의 경우에는 장기계약 LNG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0.24%의 요금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같은 과도한 공익사업 비용은 국민의 부담이 되고 있으며 한전의 경영에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